

<민주노동당 의원단 활동 성과 요약>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위를 넘어]

■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위를 내던지다(제한함).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700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180만원(23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 통장 사본]
- 민주노동당은 국회 의원회관의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없애고, 의원들에게 주어진 무임승차용 철도카드를 모두 자진 반납했습니다.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사진 / 철도카드 사진]
- 짙은 양복에 검은색 고급 세단만을 고집하던 국회에 자전거와 소형 자동차, 그리고 점퍼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국회의원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단병호, 강기갑, 조승수]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고자 석방요구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총전 20인)으로 강화하고,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처리시한을 정했습니다.
[국회법 28조 '석방요구의 절차' 개정 / 국회법 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②항 신설]

■ 국회의 투명성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

-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회의록도 없는 비공개 회의 관행을 없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69조 '위원회 회의록' ④항 개정]
 - 국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로의 안전 회부를 제한하고,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8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③항 / 국회법 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백지신탁제의 도입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3천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
- ※ 공직자 윤리 확립 강화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04년 12월 15일 발의(이영순), 05년 4월 26일 통과
05년 11월 7일 발의, 06년 12월 1일 통과

-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성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심사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하고, 퇴직후 취업승인절차 강화함.
-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시 실거래가를 등록하게 하는 등 재산등록 절차 및 심사를 강화시키고 퇴직후 취업시 취업승인절차 강화시킴.

■ 권위와 특권의 벽, 더 허물어야

- 주민소환제에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통과 필요
- 회의 출결 및 불참사유 공개와 특별활동비 출석일 수에 따라 지급
-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상설윤리심의위원회 구성
- 교섭단체의 특권 폐지와 요건 완화
- 국회의원 출신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폐지
- 청원제도의 활성화(청원심사소위 정상화, 90일내 심사 완료 의무화)
- 소위원회 인터넷 의사중계 실시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국회시설을 국민들에게 개방

[평화와 자주를 향해]

■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전 계승을 위한 결의안 통과

- 05년 3월 2일 발의(권영길), 05년 7월 6일 대안 통과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국회 결의를 이끌어 냄.

■ 남북교류협력 증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4년 9월 10일 발의(권영길), 05년 5월 3일 통과
- 남북간의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시킴.

■ 방위사업청 신설

-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 05년 6월 29일 통과
- 방위사업청 신설을 통해 국방비의 투명한 지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정책 성과>

■ 이라크파병 국군부대철군촉구결의안 제출

- 04년 6월 24일, 05년 7월 15일, 06년 11월 22일 제출
- 타당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 국군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널리 알려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어냄.

*원의 및 원내정치활동 정리 요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한달간 약 천여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백만명의 레바논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공격의 즉각 중단과 미국의 휴전반대 입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36명이 성명에 동참하여 정부가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함.

■ 용산협정 및 LPP 개정협정 저지 투쟁 진행

- 주한미군 지역역할 등 비밀문서 공개로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고 미 국방부 브리핑까지 이끌어냄. 협상의 문제점을 알림.
- 비준동의안 저지하지 못함.

■ 반환미군기지의 오염 심각성 문제 제기

- 반환미군기지에 지하수위에 기름 두께가 5m에 이르고, 기름성분에 의한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등 심각한 오염 상태, 오염 치유 비용 문제등을 제기하여 불평 등한 SOFA 규정 개정 및 협상 무효화등을 요구함..

[역사 바로세우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05년 2월 24일 발의(최용규,노회찬), 05년 12월 8일 통과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정의 구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실질화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05년 11월 30일 발의(현애자), 06년 12월 22일 통과
-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골발굴등 진상규명 및 사실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생활지원금 지원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부분이 여전히 부족함.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통과

- 05년 3월 18일발의(천영세), 05년 5월 4일 대안 통과,
- 일본의 조례폐기 촉구함.

<정책성과>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촉구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박물관 건립촉구 결의안 채택
- 이후 지속적인 동 박물관 건립사업 제기를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예정

■ 우리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다

-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일우정의 해. 그러나 일본은 독도영유권주장, 야스쿠니 신사참배등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로 동북아시아를 위협. 이영순 의원은 일본의 양심있는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
-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 독도주권수호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독도방문
- 전후 60주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 논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의원포럼
- 한일협정체결 40년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심포지움개최
- 일본 재일민족학교 ‘에다가와 민족학교’실태파악 지원방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 11년 풀뿌리 지방자치의 한 획을 그은 주민소환제 실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06년 3월 30일 발의(이영순), 06년 5월 2일 대안 통과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 그러나 비합리적·비효율적·비민주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에서 직권남용·유기를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 주민참여와 감시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를 마감하고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 것.
 -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의조건(원안:광역8/100, 자치구단체장10/100, 구의원 12/100 대안:광역10/100, 자치구단체장 15/100, 구의원 20/100) 등의 후퇴가 있었으나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자체가 큰 성과임.
- 주민소환제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법 등 주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활동 중

■ 통신 비밀·자유 보장 신장

- ‘통신비밀보호법’ 04년 11월 22일 발의(노회찬), 05년 5월 4일 대안 통과
-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 수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자유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소출력공동체 라디오 법적지위 도입

- ‘방송법’ 05년 12월 14일 발의(천영세), 06년 9월 29일 대안통과
-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법적 지위 도입으로 라디오 방송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제3의 방송영역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0W이상의 출력증강여부가 정통부의 반발로 10W이하로 규정됨. 출력증강과 일정한 주파수 대역보장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과제를 남김.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언론피해구제법’ 04년 10월 21일 발의(천영세), 05년 6월 7일 폐기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반론보도 청구권을 강화함.

<정책성과>

■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 제출

- ‘진실·미래를향한 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2004.10.21발의(이영순), 2005.6 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005. 6.30 발의(이영순)
- 과거사법은 우리 사회 어두웠던 과거인 독재정권시절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과거사법이 정치적 협상을 거치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민주인사재조사법’ ‘누더기법’으로 불릴 만큼 퇴색되어 통과
- 법안이 누더기로 제정된 이후 여야의원 61명의 찬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과거사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였으나 아직 행사위에 상정조차 안된채 계류중

■ 재향군인회법 폐지등 단체 개혁을 위한 법안제출(계류)

- 재향군인회는 7개 업체와 4개의 직영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연간 3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조직. 독재정권시절 정권이 만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자유총연맹 등 단체에게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과 특권을 버리고 단체회원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변단체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 제출

■ 신문 시장의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활동

-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책과 현실성 있는 인터넷언론 지원기준으로의 개정 촉구한 결과, 인터넷언론과의 의견청취를 이끌어내 기준을 다소 완화시키는 성과.
- 문화관광부에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조속한 구성과 민주적인 임원 선임을 이슈화하여 여론 형성한 결과, 언론개혁적 인사가 포함되어 임명됨. 또한 신문산업 진흥과 독자권의 보호를 위한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의 예산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 공세 저지.
- 문화관광부가 진행중인 언론개혁 정책 즉,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설립,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설치 등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거대 신문사 위주의 준비위 운영과 현황 파악 미비 등 졸속 운영의 실태를 비판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지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소외계층 지원을 대폭 요구하여 관철.
- 대기업 등 자본권력의 언론소유화 저지투쟁을 위하여 방송법 일부개정안(2007.2.26) 제출 (문광위 4월 임시회 상정 예정)

■ 미디어 홍수 속 수용자 주권 중심의 정책 촉구

- DMB, IPTV, WiBor 등 정부가 사업자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는 신규미디어

어 난개발정책과 수용자 주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독자적인 이슈화에 성공하였음. 향후 융합미디어 사업 및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입과 제도마련의 과제가 남아 있음.

- 2005년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가 추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논평발표로 재전송 허가 논의했고, 지상파 DMB의 유료화 추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유료화 추진 논의 저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의 줄속강행을 고발하며 논의 저지를 위한 이슈화 계속하고 있음.
- 2006년에는 케이블TV 독과점 폐해에 따른 시청자들의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켜서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사업자 육성일변도 정책을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들의 피해사례조사의 연례화 및 케이블TV 육성정책의 재검토 등 정책변화를 이끌어냄.
- 2006.12.14. 시청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케이블 이용요금 및 채널구성 변경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 제출(06년 12월 14일 천영세)
- 국민들의 미디어 참여 보장 정책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여,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열린 채널' 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와 이의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2006. 12. 14 제출. 현재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 지원사업(시청자단체활동지원,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미미한 예산 규모와 지원방식의 문제점, 조사연구사업의 주제 편향성 등을 지적하여, 공모제 및 소외계층 및 수용자 등 분야 확대 등 시청자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체계의 변화 도출함.

■ 경인방송 재허가 거부 및 재선정 관련

- 방송위원회에 2004년 12월 31일 경인방송(iTV) 재허가 거부에 따른 1300만 경인지역 시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후속대책 요구와 함께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감시시스템 등의 기준 마련과 구 경인방송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촉구를 하며 이슈화시켰고, 이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냄. 현재 이를 적극 반영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어 개국 준비중.

■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 기획예산처가 추진한 <공공기관운영법> 4월 시행에 따라 현행 방송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독립적인 방송위원회, 국회 등의 감시를 받고 있는 KBS, EBS 등이, 현 법체계를 무시한 채 정부 기획예산처 관리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여야의원들과 이의 개정안을 발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2007.2.7일 입법청원 소개, 2007.3.16 발의)

■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2005년 12월 7일 발의(천영세),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공공도서관 등의 전자문서에 대한 공정이용 개념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공성 강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2006년 11월 발의(천영세).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멀티플렉스에 대한 법적 정의 도입, 단일 영화의 과도한 스크린독점 제한 규정 신설 등으로 영화관객의 볼 권리 및 창작자의 상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기득권층의 비리를 폭로한다]

■ 안기부 x파일을 통해 삼성의 정경언 유착 폭로

- 삼성이 언론사 및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면서 관리해온 사실 폭로하여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잘못된 유착관계를 밝혀냄.
-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X-파일 육성 테잎 공개, KBS 및 MBC에 적극적인 X-파일 및 삼성 보도 요구, 삼성화재의 부당함 알리는 <우리 모두가 구분주다!>의 KBS 열린채널 방송보류, 문화관광부 장관의 '떡값 검사' 한부환 전 차관의 언론중재위원 위촉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함.

■ 재벌의 변칙 증여행위 고발

-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등 3인
- 재벌2세 3명 신종변칙증여 1조2천억대 달해

■ 삼성 불법행위 고발

- 삼성상용차 3천억원대 분식회계 적발 고발
- 이 건희 회장 삼성차 부채 '무한책임' 지적 국감
-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고발

■ 현대차 불법행위 고발

- 글로벌스 계열회사 몰아주기, 기회편취 고발
- 경영권 승계 관련 탈세 문제 지적

■ 재벌개혁 관련 공정거래법 제출

- 심상정 '05년 11월 출총제 개정법안 발의
- 자산순위 10위내 민간재벌의 중핵기업만을 적용대상,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기출자 5년 유예기간 부여, 출자한도 기존 25%유지, 적용예외 요건 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시 경쟁제한성 간주 신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 유전무죄, 무전유죄

-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처리현황, 전관변호사 구속사건 현황분석 등을 통해 유전무죄의 실태를 밝힘.

■ 외국자본 문제 공론화

- 론스타의 투기적 차익 폭로를 계기로, 외국자본의 과세등을 쟁점화시킴.
- * 내용 추가할 것

[조세정의 실현]

■ 돈세탁 방지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4년 9월 23일 발의(심상정), 2004년 12월 29일 대안 통과
- 5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통보하는 금융거래보고 의무 강화, 정치자금법 위반한 불법정치 자금에 대한 정보제공의 허용,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법 개정.

■ 뇌물에 과세

- '소득세법'개정안 04년 12월 3일 발의(심상정). 05년 5월 3일 수정 통과
-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뇌물 또는 알선 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 과세토록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 부동산 실질거래 가격 기재

- '부동산 등기법' 04년 11월 9일 발의(심상정), 05년 12월 8일 대안 통과
- 등기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함.

■ 소득과악을 위해 지급조사 활용 강화

-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종합과세 용도를 넘어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및 송속·중여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 확인등에 지급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과약과 탈루세금 방지를 강화함.
- 또한 일용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소득 등에 지급조사 제출토록함으로써 소득과약 투명성을 제고함.

<정책성과>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도록
- 사실상 부동산 부유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부유세와 일맥상통. 민주당의 부유세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서민경제 살리기]

■ 이자제한법 부활

- ‘이자제한법’ 06년 9월 25일 발의(심상정), 07년 3월 2일 대안통과
- 고금리·불법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금리 상한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킴.
- 등록대부업 및 금융권에도 이자를 제한토록 하고, 금리상한을 25%대로 낮추는 등의 이후 관련 법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 ‘주택법’ 2006.10.9, 2006, 12.22 발의(이영순), 07년 4월 2일 대안 통과
- 원가공개를 통한 주택시장의 투명성확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
- 후분양제 도입,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주택소유 제한(1가구 1주택), 공공소유 장기임대주택 확대, 환매수 분양주택 법제화등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노력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06년 11월 14일 발의(이영순), 06년 12월 22일 대안 통과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임차인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하여 우선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으로 인해 직업상의 불이익 및 피해 개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등 14개 관련 법안 통과(사법시험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지적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교통안전법, 건축사법, 교통안전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 사법시험응시자격,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원의 고용등 파산자라는 이유로 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서 파산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직업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다수 통과
- 현재 79개 법률의 자격제한에 파산조항 삭제하는 법안 제출한 상태에서 다른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어 파산자에 대한 직업제한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사행성게임의 금지와 경품금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06년 9월 8일 발의(천영세), 06년 12월 22일 대안통과
- 사행성게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품 및 환전업을 금지하고, 게임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함.

<정책성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발의(6월 28일) 하여 지속적인 활동

■ 부동산대책 마련

-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와 보유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지·주택 소유제한, 보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기본권 보장, 1가구 1주택등 대안을 제기하고 공론화함.

■ 원주, 순천 지역 화상경마장 설치 금지

- 지방의회, 지역시민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마사회에 의해 원주, 순천 지역의 화상경마장이 강행설치되고 있었음.
- 이에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부와 마사회가 설치 승인 과정에서 범위반, 거짓 보고 등 문제가 많았음을 밝혀내었고 이에 두 지역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취소하는 성과를 냄.

■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에 문제제기

○ 무주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 대응

: 공적책임없는 기업 주도적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원내에서 무주기업도시 진행과정의 법적 문제점 지적

[서민에게 복지를]

■ 무상 예방접종 입법을 통한 무상의료 일보 전진

○ ‘전염병예방법’ 05년 9월 5일 발의(현애자), 06년 8월 29일 수정통과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대 법안 중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가결시킴.

○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6세미만 아동의 무상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올해 7월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사업 예산 편성 거부로 법률의 시행이 표류. 보건복지부 및 국회가 필요한 예산 확보하도록 후속 사업을 추진 중.

<정책성과>

■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에 의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대폭 경감

○ 2005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당시)총리에게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천억으로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우선 실시하자는 정책을 전격 제안함.

○ 보건복지부는 6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및 보험적용 확대 발표
암 환자의 진료비는 외래 환자의 경우 최대 50%가 줄어드는 등, 고액중증질환의 진료비가 대폭 경감됨.

■ 진료비 Big3의 보험 적용 추진, 진료비 대폭 경감.

○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던 3대 항목(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보험적용을 추진.

○ 2006년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7천원을 호가하던 입원 식사가 2천원 이하로 낮아졌고, 2007년부터 4인실 이상의 병실료도 보험에 적용하기로 함.

○ 환자들의 고액 진료비 중 3분의 1이상이 3가지 항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확대시킴.

■ 에너지기본권 개념 사회의제화

○ 도시빈곤의 문제를 단전문제로 접근하여 에너지기본법에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성과를 남김.

■ 무상의료 8대 법안 제출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노동]

■ 수습직.경비직에도 최저임금 적용, 원청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 ‘최저임금법’ 05년 7월 22일 발의(단병호), 05년 12월 8일 통과

○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어 저임금에 시달리던 수습직.경비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감액)적용되게 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소득분배율을 포함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음

○ ‘최저임금법’ 05년 2월 2일 발의(단병호), 05년 5월 4일 통과

- 도급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이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섬

○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6개월 미만의 미성년자등 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함.

■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업가에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05년 6월 22일 발의(조승수), 05년 11월 2일 폐기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공사업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의 건설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영세건설업자와 건설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신설

- ‘근로기준법’ 06년 11월 9일 발의(단병호), 06년 12월 22일 통과
-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거가 불명확한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정부의 반대로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교부의무를 신설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정책성과>

■ 비정규직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 비정규직 법안의 ‘사용사유 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쟁점화

* 내용 추가 요

■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선

-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되는 노말 핵산에 중독된 사건(2005년 태국여성노동자 8명)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여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개선함
- 간암의 원인이 되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로 인해 사망한 사건(2006년)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여 전국적인 특수건강검진 이행 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함
-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기준이 없어, 백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항시 노출되어 있었음.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2007년 정부의 노출기준 마련을 이끌어 냄

■ 산업재해의 예방과 손쉬운 요양신청을 위한 제도개선

-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즉시 노동부에 고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즉시고지체계를 마련함
- 산업재해 통계 작성 시 고용보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 작성방식을 개선하여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여 산업안전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주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서만 첨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여 실질적인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자는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소송안내서에 반드시 부가하도록 하여 권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합체하여 1건의 서류만 제출하여 서류제출의 부담을 경감함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가 불리하였음. 이를 개선하여 사업주가 해고 경위·이유 등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소송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원청 등 직접 사용자가 아닌 경우도 공범죄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지침을 개정함

■ 비정규직 차별 개선 촉구

-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의 4대보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2005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들의 4대보험 실시토록 함.
- 2005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차별개선할 것을 요구,
-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KBS 비정규직의 외주화 문제를 집중 제기하여 인력 실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 노동자·민생법안 제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2006. 11. 3 발의(이영순), 건교위 소위 계류중
화물자동차의 최저운임이상의 적정운임보장을 위해 운임허가제를 도입하고 주선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주선료 책정을 제한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 화물운수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2007년 4월 현재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4월임사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006.11.16 발의(이영순)
임금체불 및 다단계하도급을 유발하는 제도로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아오던 시공참여자체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임사회에서 상정될 예정임.
- ‘철도안전법’개정안 2007. 3.2발의(이영순)

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승무제 확대 및 주요업무의 외주화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철도와 지하철 차량을 운행할 때 반드시 2인승무를 명시, 외주화 금지 상시업무에 철도차량운전, 관제업무, 여객을 상대로한 승무 및 역무서비스, 차량검수·정비업무, 선로 유지·보수·토목 및 기기관리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철도공사의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문제, 도시철도의 차량정비외주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불가하도록 함.

■ 관광노동자의 권리 찾기

○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 개선 노력

: 관광산업을 위한 온갖 규제완화 속에서 여행업의 부실화가 가중되고, 그 와중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는 월 40만원 정도의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

[소수자 및 인권 보호를 위해]

■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7월 19일 발의(현애자). 2004. 12. 29. 대안 통과
- 버스 바닥을 보도 턱 높이로 낮추어 휠체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손쉽게 승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저상버스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장애인 등 교통소외층이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은 교통소외층의 이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킴.
- 저상버스의 수와 운행 횟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명문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05년 9월 20일 발의(노회찬), 07년 3월 2일 대안 통과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인권위원내에 차별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함.
- 장애인에 대한 개념확장,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등 보편적 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

■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보호로 대치

- ‘사회 보호법 폐지’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04년 9월 18일 발의, 05년 6월 29일 대안 통과
- 그동안 반인권법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와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서 재소자의 인권보장을 신장시킴.

<정책성과>

■ 경찰개혁을 위해 보안수사대해체, 민생경찰전환 촉구

-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를 고문살해한 보안수사대가 여전히 전국에 42곳에 존재. 경찰의 보안수사대의 문제점을 집중제기,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막대한 인력과 시설,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안수사대 인력의 민생치안 부서로의 전환과 밀실안가로 운영되던 보안수사대 건물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기.
- 보안3.4과의 불법운영문제를 제기하고 4과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공안문제연구소 문제를 제기하여 감정 중단과 해체를 이끌어내는데 기여.

■ 새로운 인권을 위한 3대 입법안 제출

- 인권의 개념이 과거 고문 등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넘어, 헌법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짐.
- AIDS, 백혈병 등 환우들에 대한 인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AIDS 예방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각각 개정안을 제출.
-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환자들이 스스로 수혈 받을 혈액을 직접 구해오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여, 환자 및 환자의 가족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
- AIDS 예방법 개정안은 실명 검사, 직장내 강제 검진 등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일이 없고, 일상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 법안임.
-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게 빈번히 발생했던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됨.

■ 황우석 사태와 관련 생명윤리 및 예산 집행문제 제기하여 진실규명에 기여, 국정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기본법 발의

- 05년 12월 발의(권영길), 07년 4월 현재 상임위 계류중
- 역사와 인권적 관점에서 700만 재외동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실질적인 법적대상이 되도록 함.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 등 동포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해 동포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도록 함.
-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와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동 법안을 이슈화시키고 정부의 동포정책방향의 문제점을 부각시킴.

■ 재외국민보호법 발의

-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계류 중
- 2006년 소말리아 해역 우리 어선의 피랍사건 및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을 계기로 불어진 정부의 미흡한 재외국민보호대책에 대한 대안적 장치로서의 법안 마련

■ 대외원조기본법 발의 (예정)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후 원조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본법안 발의를 통해 현재의 유상원조 중심의 원조체계를 개선하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원조방향과 정책이념을 규정하도록 함.

[교육 복지,교육 민주화를 위한 한 걸음]

■ 사립학교 민주화 및 참여형 사립학교 운영체계 마련

- 사립학교 민주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립학교관련 3개 법안 발의(2004년,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개방형 감사제 도입,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친인척 교장임용 금지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2005. 12월)
- 부패사학 박람회, 각종 비리사학 고발 등으로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음.

■ 학교급식법 통과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 최순영의원은 원칙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 우수한 농산물 사용, 급식비에 대한

50% 이상의 급식지원등을 통해 우수 급식, 무상급식을 주장.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영급식 전환, 우리농산물 사용을 제도화 시키지 못하고 추상 수준에서의 명시, 무상급식을 위한 단계적 급식비 국가지원확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음.
- 급식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시스템 마련,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숙제를 남김.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 확립

- '학교보건법' 개정. 05년 2월 5일 발의(최순영), 05년 3월 2일 대안 통과
- 기존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인 건강평가제도(신체검사.의사의 진찰 및 건강조사)를 신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성 있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집단건강검진 제도 유지 등의 한계가 있음

<정책활동 성과>

■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 헌정사상 최초로 229명의 공동발의로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2006년 05월,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의무무상교육 체계 확립,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마련, 학부모,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 확대,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장애인교육 문화제, 장애인 학생 작품 전시회, 장애인교육지원법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여론 조성.

■ 돈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대학등록금

- 2005년부터 정치권 사상 최초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006년 대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 법안을 발의함. 2007년에는 등록금 상한법을 발의하여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2006년, 2007년 구성하여 대학생, 학부모, 교육사회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며, 타 정당의 등록금 정책을 이끌어냄. 2007년에는 정부로 하여금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대폭 낮추게 추동함.

■ 학생인권

-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발의(2006년 3월). 두발자유화, 체벌금

지, 차별 금지, 종교자유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 학생체별 신고센터 운영, 학생인권 박람회, 두발자유화 체벌금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구성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함.

■ 교육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대학 비정규직 처우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관련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촉구함. 대학 조교, 시간강사, 청소용역 노동자 실태 분석을 2004년, 2006년 시행함.
- 대학 당국의 불법적 노동탄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함(예-경상대, 전남대 등)
-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10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토론회 개최 등, 국회 내외의 활동 전개.

■ 농어촌 교육

- 농어촌 교육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민주노동당의 교육사 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함. 추후 농어촌교육지원법 발의를 통하여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대학입시문제 해결

- 2004년 고교 등급제 관련 폭로, 2005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관련 실태 분석을 통하여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 또한 대학 평준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대학서열체제 해체 방안을 구체화함.
-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서울대 설치령 폐지촉구 결의안 발의를 통해서 대학서열체제 해체와 입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함.

■ 교육재정 확보

- 현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 촉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발의를 통한 교육재정 확대 노력,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방안의 허구성 폭로 등으로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 무상교육 실현의 경로와 상을 제출하였으며,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음(초중등학교 완전 무상교육화를 위한 초등교육법 개정안)

■ 교육개방 저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을 통하여 교육개방의 문제점에 대한 폭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 견지를 통해서 일부 독소조항 삭제(과실송금 허용 삭제 등).
- 또한 한미 FTA 관련 교육부의 반대 정치활동 제한 관련 공문 폭로, 한미 FTA 교육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연구 등으로 반대여론 조성에 노력함.

■ 교육비리 척결

- 학교에 만연한 교육비리를 알려내고 대책을 마련함.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리예방책을 강구.
- 구체적으로는 경북교육청 교구비리 기자회견을 진행(2004년)하였으며, 사립학교 성적비리, 경력조작 등 사립학교 각종 비리에 대해 국감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어린이신문 불법기부금, 학교급식 업체 비리 등 다양한 교육비리를 제기함.

■ 실업교육 정상화

- 실업교육의 문제점을 분석,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능반, 현장실습 등 실업고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장학금 지원확대에서 출발 단계적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 대학과의 효율적인 연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된 취업을 위한 대책을 준비
- 국정감사를 통해 실업교육 현황 자료 취합 및 질의, 정책 자료집 발간함. 또한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교육개선방안 토론회(12.15)를 통해 문제제기함.

■ 대학민주화

- 대학학칙민주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분석 및 문제제기 및 대학 평의원회,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원내 의정활동을 전개함.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학칙현황 조사 및 발표, 문제제기함. 또한 예산심의에서의 대학학칙민주화 관련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대학평의원회 법제화 법안 발의함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학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이끌어 냄.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 호주제 폐지

- ‘민법’개정. 04년 9월 14일 발의(노회찬), 05년 3월 2일 대안 통과

- 가부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을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6개월 재혼숙려기간 삭제, 친양자 제도 도입 등으로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지양하고 양성평등적 가족관계 확립의 기초를 마련함.
- 호주제 이후의 신분 등록에 관한 논의가 진척이 없음.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목적별 1인1적제를 기본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함.

< 정책활동 성과 :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당당한 첫걸음 >

■ 성인지 국정감사 진행

-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소속된 상임위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국정감사 시행 (여성정책에 대한 10명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 마련)
- 이번 여성국감은 △각 의원실간의 공조체계 구축,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국감시기 여성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제화 측면에서 국정감사의 새로운 정형을 모색, 기획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계획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조직 내적으로도 다양한 여성문제를 환기시키고 향후 정책 과제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원 들 뿐 아니라 당 모든 의원, 보좌관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시킬 수 있었음.

■ 여학생 생리공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보호라는 사회적 의무로서 비롯한 것이므로, 여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결과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
- 2005년부터 생리로 인한 결석시 성적인정, 점수 부여 및 병결처리 등 방안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교육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한 총 1003개 단위기관에 대한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음.
- 공공기관의 위법 및 탈법사례, 특히 모성권 침해사례를 지적하여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함.

■ 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여성일자리창출사업으로 유의미하지만 1년도 안되는 계약기간, 낮은 임금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동시에
- 저임금에 편중되지 않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동시에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취업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할 것에 대해 촉구하였음.
- 특히, 보육노동자, 간병노동자, 방과후보육교사, 특기적성 강사들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실태를 통한 문제 제기를 하였음.

■ 여교사 모성권 실태조사

- 전국 초.중.고 학교 여교원 1,196명(교사 751명, 행정직원 222명, 비정규직 221명)을 대상으로 보건의휴가 사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8%(1,074명)가 보건의휴가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강북 꿀꿀이죽 사건 해결

- 강북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실과 학부모, 강북지역위원회, 중앙당과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
- 급식 문제, 회계관리 투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
-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전산화, 평가인증, 현금수납금지, 운영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의 정책이 마련되었음.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예산 불용액 발생 문제 해결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방과후활동진흥법 제정, 발의

-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06년 11월 24일 발의(최순영), 현재 정무위 계류 중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 전체를 총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 또한, 방과후 보육교사와 특기적성강사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였음.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보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의 원인의 하나임을 지적함.
-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였음.
-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 및 현실적 토대 마련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과제임.

■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 보육노동자 기본노동실태 및 모성권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 문제 제기하여 보육인력의 직무실태와 근로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권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음.

■ 보육행정 공무원 인력의 현실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행정 공무원의 인력을 현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여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보육행정 인력이 증가되도록 하였으나 질적 담보를 위한 대안 마련은 시급함.

■ 장애아 보육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촉구

- 총 영유아 중 장애 영유아는 9만명 정도로 추산되나 현재 장애영유아의 보육율은 6%를 간신히 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종전 1:5에서 1:3으로 완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함.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운영비와의 분리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확보를 촉구함.
-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인력 충원 및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예산으로 반영되었음.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여성장애인과 이주여성에 대한 각각의 실태조사 및 피해특성에 따른 대안 정책 제기 함.
- 성매매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전담인력을 추가배치 하였음.

■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 전국 이주여성노동자 실태 파악부터 이뤄져야 하며,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민원처리, 전담업무의 필요성 및 이주가정의 자녀 보육문제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였음.
-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을 실제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이위한 예산 확보를 함.

[환경과 미래]

■ 친환경농업 육성법 통과

- ‘친환경농업육성법’ 06년 5월 4일 발의(강기갑), 06년 8월 29일 대안통과
-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 정립, 친환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하고,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 신설, 인증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유사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규정등 친환경농업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성 제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생산 활성화를 도모함.
- 그러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 규정과 직불제규정 신설등의 내용이 빠지므로 실제적인 지원제도 미비.

■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환경 개선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05년 12월 7일발의(단병호), 06년 8월 29일 수정 통과
- 천제곱미터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 법인, 직장 보육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의 실내공기 환경 개선을 이루어냄.
- ‘아토피 프로젝트’ 등 아토피의 주요원인이 되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 임.

■ 교통세 관련 개정안 제출

-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개선과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안

(교통세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제출함.

- 교통세를 대중교통과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에 추가하였으나 실제로 교통세 재원 배분이 확대되지 않는 못한 한계가 있음.

<정책성과>

■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진행

- 환경부가 이를 반영하여 06년 '환경성질환 예방체계 구축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함.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7,600억(10년간) 확보의 성과가 있었음
-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법안' 입법을 추진 중

■ 변압기 PCBs(다염화비페닐) 오염 실태 공개(2005년)

-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일종인 PCBs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함
- 이를 계기로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정부제출)이 통과 되었음
- 현재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처리기술 확보 및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임

■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노력

- 청주 무심천 수달, 충주 붉은 박쥐 등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 : 자전거도로 건설로 멸종될 위기였던 청주 무심천 수달을 지켜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도 건설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으로 보호중인 충주 붉은 박쥐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민관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음.

■ 청주 원흥이 방죽 땀뽕이 보전대책 등에 영향을 미침

[생명을 살리는 농업]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일부개정안

- (2006.9.26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됨)
- 농어촌특별세가 특별세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년간 300억원)로 쓰이지 못하도록 농특세 지출항목을 명확히 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농어

민 복지에 사용되도록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일부개정안(2006.8.29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됨)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업자 인증제도입,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을 신설,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와 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함

<정책성과>

■ 원내의 역량이 총결집되어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함.

- 2004년 원내에 진출하자마자 당시 진행중(2004년 4월부터 협상시작)이었던 쌀협상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대응하기 시작함.(2004년 12월, 10일간 단식농성)
- 2005년 4월 정부의 쌀협상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이면합의 파문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외통상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정조사를 가능케 하였음.
- 실패한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장 . 본회의장 점거 등 최선을 다한 원내투쟁은 대중속에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하는 큰 성과를 낳음.
- 농민들의 절박한 투쟁과 연계된 강기갑 의원의 29일간의 단식투쟁은 국민, 농민대중속에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문제의 절실함을 깨우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농업희생을 위한 3자협의기구 구성

-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과정에서 양당 교섭단체와 정부로부터 농업희생을 위한 3자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받아내었음.
- 현재 양 교섭단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이후 농업희생을 위한 기구 건설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 먹거리 안전

-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2005년 3월 식품안전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출하였음
 - 8개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 개편
- 먹거리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수입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조사 등 각종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

■ 농업희생을 위한 법안 제출

- 농업 희생을 위한 7대 법안 제출
-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2006.9.26 대표발의) : 법사위 통과 유력(2007년 4월12일 법사위 상정)
 - 농가부채를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 당하는 경우, 봉급생활자는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받지만, 농어민들의 경우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압류를 개선코자, 농어민들의 생산물을 압류할 경우, 생산비와 최저생계비는 제외하고 압류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음.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발의 예정(2007년 상반기)
 -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를 당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다치고 병에 걸려도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임.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나거나 수 십 년 동안 농사일로 병을 얻게 되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농정당국과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 협의진행중.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2006.11.11 대표발의)
 - : 국회 농해수위 5월 공청회 진행 예정
 -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하여 시행케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다양화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한미FTA의 가면을 벗긴다]

- 의원단은 원내FTA특위를 구성, 체계적인 한미FTA원내투쟁을 진행하였고, 각종 대중투쟁에 결합
1. 원내활동
 - 2)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함.
- 2006년 1월 수입허용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원내(2월 임시국회부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대응해나감.
 - 특히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의사, 수의사, 교수) 전문가들, 한우협회,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

해 언론 홍보 등 원외 활동 역시 공동으로 전개해 나감.

① 경제영향평가

정책위원회와 함께 의약품, 투자자 정부제소, CGE 등 협상분과별로 영향평가 발표를 통해 졸속부실협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힘.

② 2006년 국정감사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 의약품 특허권 연장시 약품비 인상이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점,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천억 손실을 가져온다는 용역보고서, 개성공단 상품 인정 여부에 대한 미측의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FTA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국정홍보처의 여론 조작과 언론 검열 등에 대해 집중추궁함. 총 질의는 22건으로 의원실별 평균 3건이었으며, 국정감사기간동안 한미FTA 국감 관련 언론보도는 총 46건으로 의원실별 평균 5건에 달함.

③ 간담회 & 토론회

제약협회, 한의사협회, 한우협회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능단체 간담회가 유관의 원실별로 진행되었으며, 당 독자적인 토론회를 기획하여 여론화하는데 앞장섬. 국제 광우병쇠고기 피해자 증언대회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한미FTA의 실상을 폭로하고, 여론화하는데 주력함.

○ 한미 FTA 협상 저지 관련 연대투쟁

- 한미 FTA 협상 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지적재산권 공대위 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 압박함.

④ 원내 연대활동

의원연구모임 활동을 통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진행하고, 타결전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청문회, 국정조사, 총리임명동의안 등 공동의 행동을 기획함.

4. 통상절차법

- 2006년 2월 2일 발의, 9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전상정, 현재 심의 중
- 정부의 졸속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동 법안의 입법화 추진
- 법안준비과정에서 전농, 민주노총, 민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선대책 후협상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통상협정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최초의 법안 제작

2. 대중투쟁

① 4박 5일 단식농성

6차 협상 기간동안 신라호텔앞에서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의원단 전원의 단식농성을 진행함.

② 강연회, 각종 집회 참석

한미FTA 반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적 강연회에 참가하고, 전국집중, 광역단위별 각종 집회에 참석함.

2)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함.

□ 2006년 1월 수입허용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원내(2월 임시국회부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대응해나감.

□ 특히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의사, 수의사, 교수) 전문가들, 한우협회,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언론 홍보 등 원외 활동 역시 공동으로 전개해 나감.

2. 서민들의 아픔과 투쟁 속으로 [원의 활동 ⇨ 공보실 정리 중]

□ 故김선일 사망사건 등 이라크 철군, 한반도 평화(평택, 북핵 위기 등)

● 이라크 파병반대 활동

2004년 17대 국회의정 활동 시작과 동시에 이라크 침략전쟁반대와 자이툰부대 파병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명분도 경제적 실리도 없는 침략전쟁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말고 철군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파병연장의 명분이었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은 이라크 종파간의 내전격화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요파병국들 중 영국군 등이 철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파병국들이 이라크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파병반대의 여론에 아랑곳 않던 정부의 파병연장강행으로 결국 2004년 6월 22일 고 김선일씨가 사망하였고 2007년 2월27일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동의부대 소속의 고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다.

- 이라크파견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 제출
- 국방위에서 철군결의안 제안설명
- 파병한국군 철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6년 9월 이라크 현지 자이툰부대 방문 실태조사활동 전개
- 반전평화 관련 각종 집회 참석, 파병반대활동 전개

● 평화로운 세상, 통일된 한반도 변함없는 신념으로

2005년 광복60주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남북교류사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앞장섰다.

- 광주송정리 페트리어트 미사일 설치반대활동
- 6.15공동선언 5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 북녘 어린이 영양빵공장 설립 추진본부 활동
- 평택미군기지 반대 활동 전개

□ 하이스코, 포스코, 코오롱, KTX,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투쟁 결합 등

□ 故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과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등

□ FTA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캠페인, 의원단 노숙농성)

□ 신용불량 119,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운동, 대형 할인점 규제 등

□ 기타

-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등 대학투어 등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연대투쟁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

4. 원외활동

1) WTO/DDA협상 저지를 위한 10박 11일간의 홍콩 원정 활동

- 2005년 12월 홍콩에서 DDA협상이 개최됨
- 이 협상은 한국농업과 농민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었음.
- 이에 한국의 민중참가단 2000여명과 함께 홍콩 원정 활동을 통해 협상 저지를 위해 활동하였음.

2) 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례(2006년 6월, 9월) 미국 원정 활동

-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한미 FTA저지를 위해 두차례 방미 원정 활동을 펼침
- 한국의 원정투쟁단과 미국 시민사회단체의 협조속에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과 회담하는가 하면, 민주당 쿠치니치 하원의원(진보포커스 의장)과 FTA저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의원 외교활동을 전개함.